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에 미칠 영향은

# 광주·전남 첨단 고부가 산업 붕괴 우려

## 광산업·자동차·가전 기업 등 수도권 U턴 불보듯

###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첨단 의료단지 유치 타격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정부가 ‘선 지역 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국토 왜곡 발전의 전형인 ‘수도권’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광산업, 자동차·가전, 나노, 신소재, 의약산업 등의 수도권 출현현상은 물론 이전 기업의 U턴 현상이 가시화돼 이제 초기 인프라 구축단계인 광주·전남의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발표도 거의 ‘방금’ 수준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국토이용 합리화방안은 수도권 집중 육성책=이번 방안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발표됐지만 사실상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전 부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도 모두 없어진다. 내년 3월부터는 대기업도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며 업종별 차별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383개 대기업은 공장 신설 허용에 못지 않은 효과를, 수도권 진입 희망기업들은 호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 공여지역, 지원도시 사업 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수도권 총량규제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나후지역을 정비발전 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돼 있어 제 2차 수도권 규제완화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산업 기반 붕괴= 수도권 규제완화로 광섬유와 자동차 등 첨단 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클러스터 추진이 한창인 광주·전남의 주력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의 경우 이전 업체들마저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예상되는 등 광산업을 비롯한 자동차, 금형 산업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광산업과 자동차, 전자, 바이오 산업을 유치 주 대상 업종으로 하고 있는 광주·전남 국가공동산단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전남도의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우주와 관련한 연구개발, 성능시험, 위성발사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하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전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가 집중 육성할 예정인 나노기술

####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내용

항목	내용	추진시기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 개선	• 산업단지내(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선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 허용 •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의 지역내 공장의 증설 이전 규제 개선 -모든 첨단업종 기존 공장의 증설범의 확대 -첨단업종의 공장은 기존부지내증설 허용 • 과밀억제권역중 산업단지의 지역내 공장 증설범의 확대	내년 3월
공정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 서울 시내 소규모(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	내년 상반기
환경보전 전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 규제 중심으로 전환 •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범의 확대	올 11월에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내년 4월 입법 추진 내년 3월 허용범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 규제 개선	• 수도권내 설립공정의 업종변경 허용시기 등록 이후에서 설립승인 이후로 앞당겨 •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 종과제도(기본세율의 3배)개선	취득세 종과제도는 내년 상반기 기본개회 수립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 환원	•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재원에 활용	2010년 예산 반영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대책 마련

#### ■수도권 규제완화 광주·전남 피해 우려 산업

구분	산업
광주시	광산업(광섬유, 광통신, 광학제조업), 정보, 전자, 자동차(제조·정장부품), 금형
전남도	항공·우주우주산업 클러스터, 나노 등 신소재, 첨단의료 용·복합단지, 미그네슘 신소재, 신약

과 마그네슘 신소재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되고, 화순 전남대병원(암센터)과 녹십자 백신공장, 광주의 전남대·조선대 의대·광주과기원 등과 연계해 조성하려는 ‘첨단의료융합단지’의 유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와관련 전남발전연구원 이경철 기획경영실장은 “이번 수도권 완화

조치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면서 “국회에서의 저지 등 강력한 대응과 함께 정책적인 면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특위 소속 의원들이 지식경제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현정부 수도권 투자 올인 어떤 기업이 지방 오겠나”

### 국회 규범특위 업무 보고 광역경제권 집중 추경도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재형 의원)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위원장은 “수도권의 SOC 비중이 비수도권의 3.5배나 되는 등 수도권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는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허용 등 수도권 투자 촉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느냐”며 “지방기업도 수도권으로 갈 판”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규제가 있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한데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되겠냐”며 “지방에 대해 특혜라 할 정도의 지원을 한 다음에 수도권 규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에서 수차례 수도권 규제완화는 선 지방 지원 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늘 그것을 어겼다”며 “지방에서는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렇게 지방균형발전을 처참히 버릴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경쟁력을 떨어뜨려 지방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다. 꼭 찬 수도권은 비우고 텅 빈 지방은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헌법에 있는 지역 균형발전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5+2 광역경제권’과 관련, “수도권을 하나의 주체로 참여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수도권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편향적 전략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더욱이 광역경제권에 호남을 묶는 것 말도 안 된다. 광주·전남과 전북은 산업경제 측면에서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또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경우도 영남에 10개, 호남에 5개 있으며 그 내용과 질 면에서도 5개 모두 기준에 추진되는 것뿐이고 다른 지역은 신규 사업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균형위 고위 간부가 호남 배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최 위원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며 피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선 지역발전 후 규제 완화 원칙에 변함이 없선 지방 지원 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늘 그것을 어겼다”며 “지방에서는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광주·전남 지역 경제계 반응

정부가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뼈대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경제계는 “지방 산업·경제의 붕괴를 초래하는 졸속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영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은 수도권의 목소리만 전폭적으로 반영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따른 경제 효과를 지방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지방에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이익을 거둬야지 수도권에서 낸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정인화 정책기획관은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

## “지방경제 공동화 초래 졸속 정책” 철회 촉구

설·이전을 허용하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방에는 아직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첨단업종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철회를 위해 비수도권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상의 등 지역 경제계도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폐단에 대한 지적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속 추진 등을 요구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수도권 규제완화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성명서에서 “이번 조치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라는 약속을 정부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와 완화의 경우 외지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지역기업의 역외유출 등으로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의 경제 살리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국가의

성장엔진을 멈추게 하고 국가경쟁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광주전남 상공인과 지역민은 지방과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경영자총합회 관계자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경제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종대·채희종기자 jilee@kwangju.co.kr

### 조이 여행사

234-3222

380,000

438,000

519,000

623,000

1,388,000

269,000

319,000

### 기발리아 3막 4일 (38H)

649,000

### 기발리아 3막 4일 (45H)

789,000

무기해 C.C

북촌인 C.C (대우(회사유))

### 중국·대만

상해·항주·소주 4일(6A)

459,000

북경·안화(방) 4일(6A)

499,000

상해·황산(안화)·항주 5일(9A)

589,000

상해·황산(안화)·항주 5일(9A)

699,000

상해·항주·싱가포르·홍콩 5일(9A)

869,000

합차상·장보고 무척지 / 온천(북경)·황산(안화) 9일

438,000

11월 14일~16일 15일 1박 2일

발인항공권 / 전세버스

### 호텔·실천 7박 749,000

호텔 디즈니랜드 3박 769,000

호텔 피카도 7박 769,000

850,000

발해·타타이 5박 899,000

베트남 북부 하롱베이 4박 829,000

베트남 북부 하롱베이 +김포(다아)항공(포항) 4박 1,249,000

합가름/박탈 5박 999,000

제주도 2박3일 1박

주유호텔 259,000

주유호텔 239,000

제주도 2박3일 1박 149,000